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안 번호	7635
----------	------

제안연월일 : 2025. 1.

제안자 : 교육위원장

주 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1.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2.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3.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에 대한 감사
4.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에 대한 감사
5.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감사

제안이유

1.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대 5년제 도입 검토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의대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교육부 발표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거짓해명 논란이 제기되었음. 또한 장 수석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도 이미 확정되었다고 밝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음. 이러한 발언들의 진실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2.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증원된 의대 정원의 지역별, 대학별 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대한 편향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배정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교육부는 처음에 회의록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회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회의록 과기 의혹이 제기되었고, 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의사 결정 과정의 객관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배정심사위원회

가 5일 만에 3차례 회의로 결정을 내린 점, 현장 실사 없이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은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더불어 특정 지역의 의대 정원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한 의문과 함께, 특정 지자체 간부가 배정심사위원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됨. 지역별, 대학별 배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의료 수요와 공급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과 국회에 대한 위증 가능성 등 법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와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의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에 대한 감사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과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휴학 승인을 저지했으나, 이러한 방침이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를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함. 서울대 의대가 약 780명의 의대생 휴학을 일괄 승인한 후, 교육부는 12명

의 감사인단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를 실시함. 이는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를 위반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교육부가 당초 11일까지였던 서울대 감사 기간을 2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압력 행사의 일환인지 확인이 필요함.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정갈등과 관련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음. 이러한 발언이 의료계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는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이주호 장관은 의대생들과의 소통 실패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으나, 교육부의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방식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함. 서울대 의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사운영 방침을 적용하더라도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지속해서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함.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및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에 대한 감사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시도했다는 의혹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독립 기관으로, 그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교육여건 악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의평원의 평가 권한을 제한하려 했음. 이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시도로 보임. 또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인프라 구축, 임상실습 환경 개선, 교수 인력 확보 등 교육여건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평원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2025년 예산은 4,877억원에 불과함. 이는 의대들이 요구한 6조 5,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 특히 사립의대에 대한 지원은 저금리 용자에 그치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임. 따라서 정부의 의평원 독립성 침해 시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함. 동

시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현황, 계획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함. 이를 통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와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과 신뢰 보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감사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장기 미복귀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그 실효성을 검토해야 함. 특히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대책의 적절성과 실행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의대생들의 2025학년도 복귀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미복귀 시 유급 또는 제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또한 대학에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임. 이는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를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대생들의 휴학에 대해 개인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고등교육법령상 휴학은 교육과정에 등록한 학생이 입대나 질병, 어학연수나 가족의 이사 이런 개인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

을 때 신청하고 학교에서 승인해주는 것"이라며 현행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법령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2025학년도에 7500명의 의대 신입생이 한꺼번에 입학하게 될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가 질 만큼은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의대생 미복귀 대책이 실효성 있고 적절한지,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함. 또한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발언이 의료계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의대생들의 복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